호남 비노계 죽이기… 새정치, 벌집 쑤신듯 폭발 직전

혁신위, 총선 100% 국민공천 혁신안 발표

권리당원 역할 무시
호남의원들 강력 반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7일 발표한 내년 총선 공천 방안의 핵심은 안심번호 제도 도입을 통해 당원이 아닌 100%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국민공천단이 후보를 뽑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제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100% 시민참여 경선=전제 조건인 안심번호제는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할 때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임의 전화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했다. 기존 조사 방식에서는 주로 유선전화를 이용해 낮 시간에 집에 머무는 주부·노년층이 과대 대표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조직적으로 유선전화를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하거나 연령을 속여 여론조사에 응할 수 있어 왜곡된 여론조사가 이뤄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아예 이동통신사가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해 임의로 부여한 번호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 역선택 방지를 위해 새정치연합 지지자에게만 국민공천단 참여 여부를 타진토록 했다.

혁신위는 다만, 관련 법안의 통과 무산 등의 이유로 안심번호 도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 비율로 선거인단을 꾸리도록 했다. 경선은 ARS와 현장투표를 혼합 실시토록 했다.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오픈프라이머리는 희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새정치연합 방식은 사전에 지역구별로 300~1000명의 선거인단을 꾸린 뒤 후보자 간 연설이나 토론회 등을 들은 후 투표에 참여토록 한 것이 다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 및 혁신위원들이 7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공천·경선 룰과 관련한 10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역 기득권 제한=혁신위는 현역 정치인의 기득권 제한을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등을 제외한 정치 신인에게 득표수의 10%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 경선 후보자를 5배수로 한 것도 현역 의원에게 불리하다는 분석이다. 나머지 후보들이 현역 의원을 집중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실시하는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제도 원외 인사 간 합종연횡으로 현역 의원이 불리할 수 있다. 물론, 합종연횡이 꼭 현역 의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비판적 시각=혁신안은 오는 9일 당무위원회와 16일 중앙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이번 혁신안이 결집력이 높은 친노(친노무현)계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비주류에서 터져나올 수 있어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다. 우선, 권리당원의 역할이 무시된 데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새정치연합의 선거인단 구성 비율은 '일반국민 60%, 권리당원 40%'다. 이전에는 '5대 5'였지만, 지난 4월 공천혁신추진단이 권리당원 비율을 10%P 줄였다. 특히 새정치연합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 호남이고 수도권 권리당원도 대부분 호남 출신이라는 측면에서 호남 정치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권리당원 사이에서는 친노계의 인기가 낮다는 분석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마땅하지만 이중투표를 비롯한 위법적 요소와 제도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이 이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막말과 해당 행위자,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당은 관용 없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 부분도 비주류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재인 "낡은 과거와 결별, 단합하는 혁신 필요"
주승용 "권력투쟁하라 혁신위에 권한준 게 아냐"

혁신안 놓고 친노-비노 신경전
16일 중앙위 통과 진통 클 듯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7일 공천 혁신안 발표를 계기로 당내 친노-비노 진영의 전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혁신위의 공천혁신안에 주류 측은 '단합의 계기'로 삼자는 입장인 반면, 비노 진영에서는 정치 현실과 거리가 있는 '허울 좋은 안'이라며 평가절하 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로 예정된 중앙위원회에서의 혁신안 처리를 놓고 친노-비노 진영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친노와 비노 진영의 불신 등을 고려할 때, 결정적 계기가 없는 한 중앙위원회 결과와 관계없이 신당 및 분당의 흐름이 급물살을 타지 않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혁신위의 공천혁신안 발표를 앞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부터 이견이 터져 나오며 당내 긴장감은 고조됐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낡은 과거와 결별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단합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혁신위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곧바로 비주류인 주승용 최고위원이 문 대표의 발언을 받아쳤다. 주 최고위원은 "위험천만한 발언에 한 말씀 드리겠다. 혁신을 바라는 구성원의 의견에 혁신위가 과민한 말을 쏟아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에 반발한 혁신위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혁신위에 권력투쟁을 하라고 권한을 맡긴 것이 아니다"며 "혁신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친노·비노 진영 사이의 공방도 점차 격해지고 있다. 특히, 주류인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김한길 전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게 날을 세워 전선이 더 확대되는 모습이다. 최 본부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안 전 대표의 언급에는 방향성이 있다. 신당을 언급하며 통합을 저해하고 분열의 틈새를 노리는 언급과는 다르다"며 "(김 전 대표와 박 전 원내대표는) 대안 없이 비판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전 원내대표는 SBS라디오에서 최 본부장을 겨냥해 "제가 혁신위에 반대한 적이 없다. 옳지 않은 태도"라면서 반발했다. 특히 "친노 일부에서 이간질하고 분리책을 쓰려 하고 있다. 심지어 친노의 모 의원은 광주 현역 의원에게 탈당하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혁신위 공천혁신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당장 100% 국민참여선거인단 경선 제도가 실질적인 동원선거는 물론 참여도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제도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참여제는 대중적 조직력이 강한 친노 및 주류 진영에 유리한 제도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여성, 청년, 장애인에 대한 25% 가산점도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후보와의 경쟁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기준 또 결론 못내

획정위 통폐합 거론 농어촌 순회 방문… 전남은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오전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기준 및 공천·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으나 여야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합의를 이끌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초까지 획정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선거구 획정기준, 의원정수 및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 선거제도 개혁 및 선거구획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이 두루 논의됐다.

여야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오는 10일 전까지 적어도 선거구 획정기준만큼은 합의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놓고 입장 차가 워낙 커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욱이 여야를 막론하고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농어촌 특수성을 획정기준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여야 지도부가 나서서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11월15일까지 연장된 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각각 비중을 두는 등 양당 지도부의 입장차도 커서 당분간 회동 성사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번 주에 인구수 미달로 지역구 통폐합이 거론되는 농어촌 선거구 지역 등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키로 했으며, 이날 오후 첫 번째 일정으로 경북 지역을 방문했다. 전남지역은 오는 9일 오전 방문, 전남도의회에서 시민단체와 학계 인사 등의 입장을 들을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